

오바마 정부의 경제 · 통상정책 방향과 시사점



목 차

요 약 / 1

1. 오바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방향 / 3

- 3 가. 오바마 경제팀 주요 인물 및 성향
- 8 나. 111대 미 의회 구성 및 의미
- 9 다. 주요 경제·산업정책 방향
- 17 라. 주요 통상정책 방향

2. 우리나라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 21

- 21 가. 개요
- 22 나. 기회 요인
- 26 다. 위협 요인

3. 오바마 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국 평가 / 28

- 28 가. 개요
- 30 나. 중국
- 32 다. 일본
- 33 라. 인도
- 35 마. 대만
- 36 바. EU
- 38 사. 프랑스
- 39 아. 독일
- 41 자. 영국
- 42 차. 러시아
- 43 카. 멕시코
- 45 타. 브라질
- 46 파. 사우디 아라비아
- 48 하. 이란

요 약

오바마 정부가 현지 시각으로 1월 20일 공식 출범했다. 오바마 경제팀은 시장의 당초 우려와는 달리 좌파 민주당 색채가 짙은 인사들보다는 대부분 클린턴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실용적인 중도주의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가이스너, 서머스, 오스작 등 주요 인물들이 자유무역주의 신봉자인 루빈 前 재무부 장관의 인맥으로 분류되며, USTR 대표에는 자유무역 찬성론자로 알려진 론 커크를 기용했다.

오바마 정부의 경제·산업정책은 집권 초기 경기부양 올인, 중산층 강화,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의 전환, 그린산업 육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당면과제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8,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 계획(ARRP :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을 추진하고, 세제 개편과 보건의료 부문 개혁을 통해 중산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금융 및 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를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오바마 정부는 당면 과제인 국내 경기부양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도 통상 아젠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 극복과 공정무역을 구실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되나, 그 강도는 당선 직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별로는 중국, 산업별로는 철강과 섬유산업처럼 미국이 경쟁력을 잃은 산업에 선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부시 정부가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라는 전략 하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양자 간 FTA보다는 다수의 국가를 포함하는 지역협정이나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 간 협정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은 우리나라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 부문에서의 양국 간 입장 차이를 해결한다는 전제 하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이 확보되고, 양국 간 투자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면서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 위주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초고속 인터넷 보급 확대와 보건의료 부문 개혁은 우리나라 IT산업의 대미 수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린산업 육성정책은 국내 관련 산업의 발전과 대미 수출·투자진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오바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은 우리나라에 위협 요인으로도 작용할지 모른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일자리 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중단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의 그린필드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

오바마 정부 출범에 대해서 주요국들은 각국이 처한 산업발달 수준이나 원유생산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오바마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모든 국가가 기대감을 표시한 반면, 미국 내 일자리 확보를 위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린산업 육성정책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산유국 간 입장차이가 나타났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단기적으로 그린산업 관련 대미 수출이 늘어나는 등 기회 요인이 있다고 반겼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기업과의 경쟁 격화를 우려했다. 개도국은 미국의 환경규제 강화가 자국 기업들의 관련 비용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고, 사우디와 같은 산유국은 그린산업 육성정책이 장기적으로 석유 수입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미국의 중동지역 철수정책에 따른 유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 인도 등 대부분의 원유 수입국들이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이유로 기대감을 표시했다. 오바마 정부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아웃소싱 기업에 세제혜택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많은 국가일수록 피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는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등 각종 아웃소싱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경제에 동조치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1. 오바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방향

가. 오바마 경제팀 주요 인물 및 성향

□ 개요

- 오바마 경제팀은 시장의 당초 우려와는 달리 좌파 민주당 색채가 짙은 인사들보다는 대부분 클린턴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실용적인 중도주의 성향의 인사들로 구성됨.
- 가이스너, 서머스, 오스작 등 주요 인물들이 자유무역주의 신봉자인 루빈 前 재무부 장관의 인맥으로 분류되며, USTR 대표에는 자유무역 찬성론자로 알려진 론 커크를 기용함.

□ 경제·통상정책 관련 행정부 및 백악관 내 주요 인물 및 성향

- 재무부 장관 : 티모시 가이스너(Timothy F. Geithner) 뉴욕 FRB 총재
 - 뉴욕 FRB 총재로서 헨리 폴슨 재무부 장관 및 버냉키 FRB 의장과 함께 현 금융위기 해결책 마련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베어 스톨스 정부 구제안과 시티그룹 구제안 마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평가됨.
 - 非학계 출신자로서 관료 사회에서 잔뼈가 굵어 추상적인 이데올로기를 지향하기보다는 실용적인 시각을 견지한 인물로 분석됨.
 - 현 금융위기 해결에 있어 도덕적 해이는 2차적인 문제로, 위기 해소 이후 금융 시스템 규제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는 것으로 알려짐.
 - FRB 내에서 지속적인 이자율 인하 정책 추진을 요구했으며, 외교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서 국제경제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는 동안 미국의 FTA 체결 확대를 지지함.



-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아프리카, 인도, 태국, 중국, 일본 등지에서 산 경험 있으며, 중국어 및 일본어 구사

○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Director of National Economic Council)

: 로렌스 서머스(Lawrence Summers) 前 재무부 장관

- 경제학자로서 클린턴 정부 시절,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가이스너 재무부 장관과 함께 루빈(前 재무부 장관) 사단 중 한 명인 것으로 평가됨.



- 재무부 장관 재임 시, 그린스펀 FRB 의장과 함께 이번 금융위기를 몰고 한 파생 금융상품에 대한 감시 강화책을 무산시켜, 비판가들에게 "근본적인 자유시장 주의자"로 빈축을 샀으나, 서머스는 자신을 "자유시장 진보주의자(Free market progressive)"로 평가하며 경기침체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지지함.
- 루빈 前 재무부 장관과 함께 NAFTA를 지지하였으며, 중산층 소득 확대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짐.
- 현지 언론에서는 서머스 위원장이 능력은 탁월하나 직설적인 성격으로 인해 논란(선진국 환경오염을 개도국으로 수출해야 한다고 적은 메모, 여성이 남성보다 수학이나 과학 능력에서 뒤처진다는 발언 등)을 종종 일으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조정자 면모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함.
- *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의 최측근 경제 보좌관으로 특정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조율하여 대통령에게 제시하는 자리임.
- 미국 대선 기간 중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 경제 자문관 역할을 수행했으며, 당선 직후 발표한 "2011년까지 250만 개의 일자리 창출" 경기 부양안은 서머스 위원장의 작품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Financial Times는 서머스 위원장이 버냉키 FRB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0년에 이 자리를 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함.

○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Chairman of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 크리스티나 로머(Christina D. Romer) 버클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조세정책 전문가로서 남편이자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로머(David Romer)와 함께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대공황 이후 미국 경제 회복 및 경기 팽창”에 대한 저술로 널리 알려짐.



*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 내 국가경제위원회를 신설한 후, 기존의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영향력은 축소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국과 글로벌 경제 모니터링 및 정부가 고려하는 특정 정책의 경제적 장·단점 연구 기능은 여전히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가 수행하고 있음.

○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장(Chairman of Economic Recovery Advisory Board) : 폴 볼커(Paul A. Volcker) 前 FRB 의장

- 폴 볼커는 1979년에서 1987년까지(카터 민주당 정부 ~ 레이건 공화당 정부) FRB 의장을 역임했으며, 1981년 13.5%까지 치솟은 인플레이션율을 1983년 3.2%로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현지 언론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폴 볼커가 내정된 것에 대해서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Director of National Economic Council)을 견제하고, 경기회복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통화가 시장에 공급된 후 우려되는 인플레이를 통제할만한 인물로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함.

* 오바마 정부에서 신설된 경제회복자문위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민간 전문가(Outside the government)들로 구성되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6년 신설한 대외정보자문위원회(Foreign Intelligence Advisory Board)가 모델이 됨.

- 국내정책위원회 위원장(Director of Domestic Policy Council) : 멜로디 반스(Melody Barnes) 미국 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정책담당 부소장

- 상원 법사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 위원인 테드 케네디(Ted Kennedy) 상원의원의 선임 보좌관(Chief Counsel)으로 범죄 방지, 이민, 파산, 시민권 보호 및 여권 신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에 걸쳐 자문을 제공함.



- 향후 보건복지부 장관(내정자 : 前 상원의원 톰 대של(Tom Daschle)과 공조하여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예산관리처장(Director of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피터 오스작(Peter Orszag) 의회 예산국장

- 보건의료 정책 전문 경제학자로서 의회 예산국(Congress Budget Office) 내 보건의료 정책 관련 팀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건의료 자문 패널(Panel of Health Advisors)을 발족하기도 함.



- 미국 정부의 공적 자금 조달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보건의료 비용 인플레이션을 꼽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 부문에서 IT 강화를 주창함.
- 클린턴 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 및 경제정책 자문관(Economic policy assistant)으로 활동하였으며, 이후에는 중도좌파 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에서 해밀턴 프로젝트(연구소 내 경제정책 연구 그룹)와 퇴직자 안전망 프로젝트(Retirement Security Project : 퇴직자 소득 향상을 위한 민관 차원에서의 인센티브 촉진)를 주도함.
- 가이스너 재무부 장관,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루빈 사단의 일원으로 알려짐.

○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사무국장(Economic Recovery Advisory Board Staff Director) : 어스텐 굴스비(Austan Goolsbee) 시카고 대학교 교수

- 중도주의 경제학자이자 조세정책 전문가로서 대선 당시 시니어 경제정책 참모로 활동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경제정책의 큰 틀을 만든 인물로 알려짐.

- 굴스비 교수는 크리스티나 로머를 의장으로 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ors) 위원으로도 지명됨.



-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인 George F. Will은 2007년 굴스비와의 만남 이후, "민주당과 경제학자(Democratic Economist)"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하였는데, 동 기고문에서 굴스비는 소득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교육 강화를 꼽고,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세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함. (고소득층 증세, 중산층 감세)

○ 미 무역대표부 대표(USTR : US Trade Representative)
: 론 커크(Ron Kirk) 前 달라스 시장

- 변호사 출신으로 NAFTA를 지지하는 등 자유무역찬성자로 알려져 있으며, 2001년 미국과 멕시코 간 NAFTA 자유로(NAFTA Freeway) 건설을 옹호하며, 이를 두고 "양국 간 교역의 참된 강(True river of trade between our communities)"이라고 지칭한 바 있음.



- 일각에서는 론 커크 前 달라스 시장의 국제협상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두고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미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커크가 "무역과 무역의 혜택에 대해 예리하게 이해하고 있다"며 환영함.
- 향후 상무부 장관과 함께 무역 관련 이슈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상무부 장관은 뇌물 수수 스캔들로 인해 뉴 멕시코 주지사 빌 리차드슨(Bill Richardson)이 수락을 철회함에 따라 공석으로 남아 있음.

나. 111대 미 의회 구성 및 의미

□ 상·하원 구성 현황

- 2008년 11월 대선과 함께 상원 100석 중 35석에 대한 선거가 치러졌는데,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110대 상원 의석(48석)보다 7석이 증가한 55석을 차지함.
- 민주당 코커스에 참석하는 무소속 의원인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버몬트), 조 리버맨(Joe Lieberman, 코네티컷) 의원까지 합칠 경우 57석이며,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으나 민주당 차지가 거의 확실시 되는 일리노이와 미네소타 상원 의석까지 합칠 경우, 총 59석으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Filibuster)¹⁾를 방지할 수 있는 60석에 근접함.

<111대 상원 구성 현황(2009년 1월 12일 현재)>

구분	민주당	무소속	공화당	공석	총계	실질 민주당 對 공화당
110대 말	48	2 (민주당 코커스)	49	1	100	50:49
111대 초	55	2 (민주당 코커스)	41	2 (민주당 확정적)	100	59:41

자료 : www.senate.gov

- 2008년 대선에서 하원 435석에 대한 선거가 치러진 결과, 민주당은 110대 말보다 21석이 늘어난 257석을 확보하며 전체 하원 의석 수의 60%에 근접함.

<111대 하원 구성 현황(2009년 1월 12일 현재)>

	민주당	공화당	총계
110대 말	235+1(공석)	199	435
111대 초	257	178	435

자료 : www.house.gov

1) 소수와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이용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민주당 집권 111대 의회의 의미

- 정부와 의회 다수당 모두 민주당이 차지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건의료(Health care) 부문의 개혁이나 금융 산업 규제강화, 기후변화 대응법안 등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클린턴 정부 집권 초기 2년간(상·하원 모두 민주당 집권), 부시 정부 집권 초기 6년간(상·하원 모두 공화당 집권)에는 정부의 아젠다 추진이 상대적으로 순조로웠던 것으로 평가받음.

다. 주요 경제·산업정책 방향

- 집권 초기에는 경기부양에 올인
- 중산층 강화에 초점
- 작은 정부에서 케이니즘(Keynism)을 반영한 큰 정부로 전환
- 그린산업 육성

□ 당면과제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8,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 계획(ARRP :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 추진

- 동 법안은 미국 시각으로 1월 15일 발표된 ARRP 초안으로 2011년까지 향후 2년간 약 4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또는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 전체 예산의 33%에 달하는 2,750억 달러를 개인 및 비즈니스 감세(세제 환급)에 투입하고, 5,500억 달러를 재생에너지 개발 및 브로드밴드 확대, 보건의료 부문 개혁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의료 기록 전산화, 도로, 학교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경기 부양책을 당면한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Downpayment)로 삼겠다고 강조한 만큼 IT와 재생에너지 산업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별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모든 계약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목적, 총 투자금액 등)과 그랜트 경쟁현황 및 수주업체 등을 공시하는 한편, “경기부양법 책임성 및 투명성 위원회 (Recovery Act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를 발족하여 자금의 운영 현황을 감독하고, 문제 발견 시 조기 경보체제를 발동할 예정임.
- ARRP 초안의 핵심 내용은 고효율 청정에너지, 21세기형 교육, 보건의료 비용 감축 등 8개 분야로 크게 나뉘며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음.
 - ① 고효율 청정에너지 분야(Clean, Efficient, American Energy)
 - 스마트 그리드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역점을 둬으로써 에너지 송전, 배전, 생산 시스템 대전환(예산 : 320억 달러)
 - 공공 주거시설 내 에너지 효율성 제고(예산 : 160억 달러)
 - 중산층(Modest income) 주택에 내후성 증강(Weatherize)(예산 : 60억 달러)
 - ② 과학과 기술로 미국 경제 전환
 - 과학시설, 연구에 투자 확대(예산 : 100억 달러)
 - 브로드밴드 인터넷 액세스 확대(예산 : 60억 달러)
 - ③ 도로, 교량, 교통시설(Transit) 및 수로 재건 및 현대화
 - 고속도로 건설(예산 : 300억 달러)
 -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하도록 투자 확대를 통해 연방 및 기타 공공 인프라 시설 현대화(예산 : 310억 달러)
 - 수질개선, 홍수 방지 및 환경 복구 투자(예산 : 190억 달러)
 - 교통 체증과 가솔린 소비를 줄이기 위해 교통시설 및 철도에 투자(예산 : 100억 달러)
 - ④ 21세기형 교육(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 Title I, IDEA 등의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도록 로컬 학교에 자금 지원(예산 : 410억 달러)

- 주정부가 로컬 학교나 공공 대학 등에 지원하는 자금과 치안 유지 등 필수적인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삭감하지 않도록 자금 지원(예산 : 790억 달러)
 -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Pell 장학금(저소득층을 위한 무상 장학금) 상한선을 500달러 증액(예산 : 156억 달러)
 - 고등교육 현대화(예산 : 60억 달러)
- ⑤ 고용주 원천징수 연방소득세 감세(Make work pay tax cut)²⁾ 및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제공(Tax cuts to make work pay and create jobs) (예산 : 2,750억 달러)

[개 인]

- 근로자 1인당 500달러 또는 근로가구당 1,000달러 세액 공제
- 저소득층 대상 세액 공제(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확대 및 자녀 공제 확대
- 대학 등록금 2,500달러 세액 공제
- 첫 주택 구매자가 받은 7,500달러 세액 공제 금액의 차후 환급 의무 철폐

[기 업]

- 16~24세의 청소년 중 실직상태이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 (Disconnected youth)을 고용하거나 최근 전역한 퇴역군인을 고용할 경우, 세금 공제 기회 확대
- 당해 연도에 손실이 날 경우, 직전 2년간 소득세 납부액에 대해서 기납부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Net operating loss carryback), 대상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남.³⁾

2) 월급 때마다 원천징수하는 연방소득세에 대해서 세액 공제함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가짐.

3) 이를 통해 기업은 결과적으로 세금을 환급받는데, 작년 초 부시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을 구상할 때도 동안이 고려되었으나 경기 과열 장본인인 기업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바 있음.

- 신규 투자에 대한 가속 감가상각을 허용(Bonus depreciation)하는 한편, 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비용공제 한도액을 2배로 확대

⑥ 보건의료 비용 감축(Lower healthcare costs)

- 의료 실수를 방지하고 환자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의료 부문 IT 확충(예산 : 200억 달러)
- 예방 의료 및 최적의 보건의료 수행(Treatment)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확대(예산 : 41억 달러)

⑦ 경제난으로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 지원(Help workers hurt by the economy)

- 실직자 보험 및 구직에 필요한 트레이닝 확대(예산 : 430억 달러)
- COBRA 프로그램(실직자들이 임시로 기존 고용주가 제공하던 의료 보험을 유지토록 해주는 지원) 확대 및 단기간 동안 Medicaid(저소득층 대상 정부 운영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옵션 제공(예산 : 390억 달러)
- 푸드 스탬프(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식량 배급표)를 13% 이상 확대 보급(예산 : 200억 달러)

⑧ 공공 분야 일자리 유지 및 주요 서비스 보호(Save public sector jobs and protect vital services)

- 연방정부의 Medicaid 비용 부담률이 일시적으로 증가(예산 : 870억 달러)
- 주정부 및 로컬 정부의 법 집행에 필요한 자금 지원(예산 : 40억 달러)

-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내정자인 로머 교수와 바이든 부통령의 선임 경제 자문관 번스타인(Jared Bernstein)박사가 발간한 “ARRP 일자리 창출 효과 보고서(The Job Impact of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에 따르면, 향후 2년간 경기 부양책을 통해 약 3백~4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또는 보호)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부양책 부문별 일자리 창출 효과는 아래와 같음.

<경기부양책 부문별 일자리 창출 효과>

(단위 : 개)

주요 부문	일자리 창출 (또는 보호)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에너지	459,000	305,000	153,000
인프라	377,000	236,000	142,000
보건의료	244,000	166,000	78,000
교육	250,000	166,000	83,000
저소득층 보호	549,000	140,000	409,000
주정부 지원	821,000	442,000	379,000
근로소득감세	505,000	0	505,000
법인세 인센티브	470,000	0	470,000
총 일자리 창출 수	3,675,000	1,456,000	2,219,000

자료 : The Job Impact of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

□ 주택시장 안정화 및 신용공급 확대에 주력

- 경제 위기를 촉발시킨 부실 모기지 시장에 개입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에 나서는 한편, TAR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기금 중 미집행한 3,500억 달러에 대한 지원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대출 의무 요건을 부과하고, FRB와 공조하여 시중에 신용공급을 확대할 예정임.

□ 경기침체가 가속화될 경우, 금융 산업과 자동차 산업에 이어 타 불황 산업으로 까지 구제방안 확대

- 작년 12월 19일 부시 대통령은 GM에 94억 달러, 크라이슬러에 40억 달러 등 총 174억 달러의 단기 긴급자금 지원 결정을 발표함.
- 올해 3월까지 자구계획에 따라 회생 가능성(Financially viable)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을 회수한다는 시한부 조건 부과
- 자동차 산업 구제방안은 경제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철강이나 화학 산업 등 불황 산업에까지 정부가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상징성을 내포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해석하고 있음.
- 미국 철강업계는 구제 요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불황 타개를 위해 현재 구상 중인 경기 부양책 내 미국산 철강(Buy American)만을 사용하는 안을 삽입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임.

□ 에너지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육성

- 대선 과정에서 선거 공약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그린산업 육성정책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향후 10년에 걸쳐 1,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차세대 바이오 연료 및 연료 인프라 개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상용화 촉진, 상용화 단계의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 저공해 석탄 발전소 건립 등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
- 아울러 현재까지 주정부 차원에서 시행했던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⁴⁾ 제도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강제로 실시하고, 총생산 전력 중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비율을 2012년까지 10%, 2025년까지 25%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음.
- 오바마 정부는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Shovel ready(당장 삽질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뜻)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자금 지원을 승인할 예정이며,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일자리 창출 효과를 증명해야 함.

□ 금융 및 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강화

- 금융 위기를 계기로 "작은 정부" 원칙 하에서 탈규제나 최소한의 규제 부과 정책을 고수해왔던 부시 정부에 대해 비난이 고조됨에 따라 금융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걸쳐 탈규제에 제동이 걸림.
- 특히 親기업적인 성향의 부시 정부 시절 느슨해졌던 환경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후변화와 관련한 온실가스 규제(Cap and trade 프로그램 등)는 필히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함.
- 12월 11일 폴란드 포즈난에서 개최된 UN 기후변화 회의에 미국 대표 자격으로 참가한 존 케리 상원의원은 오바마 정부와 의회가 최대한 빨리 의무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는 협정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힘.

4) 전력회사가 일정 비율 이상의 전력을 재생에너지원(바이오매스, 지열, 풍력, 태양열 등)으로부터 생산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전체 생산된 전력 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려는 제도. 주정부 대다수가 강제로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주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각 에너지원에 대한 비율을 지정해 놓기도 함. 현재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의무 목표 비율을 설정하여 강제하고 있지 않음.

-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스티븐 추(Steven Chu, 에너지부 장관), 캐롤 브라우너(Carol Browner, 백악관 내 환경·에너지 정책 최고 책임자), 리사 잭슨(Lisa Jackson, 환경청장) 등으로 정부 내 환경 및 에너지 팀을 내정한 것도 이를 뒷받침함.
- * 브라우너와 잭슨은 환경 규제 강화 신봉자로 알려져 있으며, 부시 정부가 환경론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입했던 親기업조치들을 뒤집을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음.
- 온실가스 규제책의 일환으로 작년 6월 상원에 상정된 후 부결된 바 있는 Baxter-Lieberman-Warner Climate Security Act of 2008(S.3036)과 유사한 법안이 발효될 경우, 대미 수출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Baxter-Lieberman-Warner Climate Security Act of 2008(S.3036) 주요 내용>

- 대상 시설에서 생산 및 소비되는 화석연료 및 온실가스와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연방 온실가스 등록소 설립
- 2012년부터 2050년까지 매년 감축되는 온실가스 배출권(GHG emission allowances)을 구체적으로 규정
 - 법안 시행 마지막 해인 2050년에 2005년 수준보다 66% 감축 목표
- 배출권 거래 시스템 확립
 - 시행 첫해인 2012년에는 1/4의 배출권을 무상으로 배급하고 점진적으로 무상 배급 비율을 줄여나가 2031년까지 경매 비율을 70%까지로 확대함.
- 기후 변화 크레딧 회사(Climate Change Credit Corporation)를 설립해 배출권 경매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제지 등의 1차 제품(Primary products)과 소비 시 직·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반드시 배출권(allowances)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위반 시 미국 영토 반입이 금지됨.
 - 해당 수출국이 같은 기간 동안 미국과 비교 가능한(Comparable) 감축 실적을 올린 경우, 최첨단 청정기술을 설비·사용하고 규제 프로그램을 이행했거나 최빈국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미할 경우에는 동 요건 충족 대상에서 제외함.
 - 미국 정부는 ① 제도 시행 3년 전에 예상되는 미국의 배출 상한선을 공표한 후, 영향을 받는 수출국가와의 협의를 진행함으로써 미국과 비교 가능한 실적을 거두도록 하고, ② 제도 시행 2년 후에 미국 감축 실적과 수출국 실적을 비교함으로써 배출권 의무 부과 여부를 판단함.

□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진화된 후 보건 의료 부문 개혁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세제 개혁을 통한 부의 재분배) 추진

- 부시 정부의 트리클다운(Trickle-down : 대기업에 대한 재정적 우대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이득이 전달됨.) 정책과 대별되는 상향식(Bottom-up) 경제철학 시행
- 미국은 의료보험을 민간 부문에 맡김에 따라 미국 국민 중 4,500만 명이 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이며, 총 의료비 지출액은 지난 8년간 실질 임금 상승률보다 3.7배나 빠르게 확대됨.(2005년 기준, 연간 GDP의 15.3%에 육박)
- 건강기록 전산화나 병행수입⁵⁾ 허용, 복제약 장려 등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공공보건 플랜을 도입함으로써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추구하며, 필수적인 임상예방 서비스를 보험 커버리지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함.

□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일자리 아웃소싱 기업에는 세제 혜택 종료

- 외국으로 오퍼레이션을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종료하는 한편, 미국 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공제 및 공공입찰 계약 수주 지원정책을 추진함.
- 오바마 대통령은 2007년, “미국 내 본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 풀타임 종업원 수와 비교하여 미국 내 종업원 수를 유지하였거나 확대한 기업에 대해서 과세 대상 소득의 1%만큼 공제한다.”는 내용의 법안인 Patriot Employer Act를 스폰서 한 바 있음.

5)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뜻하며,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수입품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음.

라. 주요 통상정책 방향

- 양자 간 FTA 시대 막 내리고 WTO 통한 다자간 협정에 주력
- 경기 불황으로 업계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무역 명목 하에 선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 오바마 정부는 당면 과제인 국내 경기부양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도 통상 아젠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 실질적으로 중국산 수입 범람 문제와 무역조정지원법(TAA) 연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무역 정책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황임.

- 무역조정지원법의 대상 범위를 서비스 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 제조업 근로자에게 제공하던 커버리지를 확충하는 내용이 경기부양책 초안에 포함되어 있음.

□ 양자 간 FTA보다는 다수의 국가를 포함하는 지역 협정이나 다자간 협정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임.

○ 부시 정부가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⁶⁾라는 전략 하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양자 간 FTA 협정 체결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수의 국가를 포함하는 지역 협정이나 WTO 협상을 통한 다자간 협정 체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 무역촉진권한) 만료로 추가적으로 신규 양자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중 행한 연설에서 “WTO 틀 내에서 노동자, 빈국, 공중 건강 및 환경에 대한 국제 기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역사적으로도 윌슨, 루스벨트 대통령부터 케네디, 클린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은 다자간 협정 체결을 선호해왔음.

6) 시장개방 의지가 강한 국가들과 양자·지역 FTA를 先체결함으로써 이 대열에서 제외된 협상 대상국이 시장 개방을 서두르도록 압박하는 전략

-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한-미 FTA, 미-콜롬비아 FTA, 미-파나마 FTA 등은 경제적, 외교적, 전략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결국 통과될 것임.
- 대선 캠페인 중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자동차 이슈)와 미-콜롬비아 FTA(노동 이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지만 기존 협정문에 약간의 수정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
 - 시니어 부시 대통령 시절에 협상한 NAFTA를 물려받은 클린턴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협상한 미-요르단 FTA를 물려받은 주니어 부시 대통령은 추가협상(Side agreements) 형식으로 노동 및 환경 조항을 개정한 후 의회 비준을 얻은 바 있음.
 - 특히 자유무역주의 신봉자인 루빈 前 재무부 장관의 인맥으로 분류되는 가이스너, 서머스, 오스작 등이 경제팀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의회에 계류 중인 FTA가 통과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민주당이 지배한 의회 역시 오바마 정부의 설득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FTA를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미-파나마 FTA는 의회 반대 요인이었던 파나마 국회 의장 페드로 미구엘 곤잘레스 핀존(Pedro Miguel Gonzalez Pinzon)이 사임함에 따라 별다른 의회 반대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 페드로 미구엘 곤잘레스 핀존은 미군 살해 혐의로 파나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로 판결이 났으며,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부패 정치의 온상이라며 강하게 비난한 바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NAFTA 재협상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함.
 - NA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요원한 것으로 평가되며, 설상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 미국의 요구사항에 대한 반대급부를 조율, 수락하기는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보호무역주의 압력 증가

- 경기침체 가속화 및 무역수지 악화로 인해 철강이나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며, 공정무역 강화를 주요 캠페인 공약으로 내세운 오바마 정부가 이를 수용하여 보호무역주의가 전반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주요 타깃 국가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철강, 섬유 등 피해가 큰 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할 전망이다.
- 수퍼 301조 등 극단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보다는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부과, WTO 제소를 통한 제재 조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됨.
- 작년 11월 개최된 G20 및 APEC 정상회담에서는 향후 1년간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동결(Standstill)하고, WTO에 비합치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으나, 경기침체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행 가능성이 점차 불투명해짐.
- 작년 12월 발표된 미국의 자동차 산업 구제안은 보조금 성격이 강하다는 논평이 주요 언론에 다수 게재되었으며, 컬럼비아 대학교 자디쉬 바그와티(Jagdish Bhagwati) 교수는 동 구제안이 1930년대 보호무역전쟁을 촉발시킨 미국의 Smoot-Hawley 법(수입품에 관세 대폭 인상)의 교훈을 무시한 것이라고 Financial Times 논평을 통해 비판함.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성격 조치>

국 명	내 용	유 형
미국	BIG 3에 174억 달러 긴급 구제금융 제공	보조금
프랑스	국가 펀드(State fund)를 조성하여 외국기업으로부터 프랑스 기업 인수 방지	투자 제한
인도	수입산 콩기름에 20% 관세 부과, 다른 종류의 조리용 기름에도 추가 관세 부과 고려 중	관세 인상
러시아	수입산 차에 최대 35%, 수입산 농업용 장비에 15%, 수입산 돼지고기 및 닭고기에 급격한 관세 인상	관세 인상
중국	철강, 섬유 등 수출품에 세금 환급	보조금
브라질, 아르헨티나	수입산 와인, 섬유류, 가죽 제품 및 복숭아 등에 대해 관세 인상 고려 중	관세 인상

자료 : Washington Post(2008.12.22)

□ 오피니언 리더들이 예상하는 통상정책 방향

KOTRA의 미국 각 지역 KBC가 작년 11월(대선 직후)과 금년 1월(오바마 정부 출범) 2차례에 걸쳐 소재지의 학계와 업계 전문가와 실시한 직·간접 인터뷰 결과를 정리함.

○ Seung Bach(California State Univ., 경영전략 교수)

-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치성향이 비록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띠지만 집권 이후에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임.

○ 박윤식(George Washington Univ., 국제금융 교수)

- 1930년대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대공황이 더욱 장기화된 경험을 되짚어볼 때, 이번에는 이와 같은 실책을 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 11월 G-20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1년간 신규 무역 및 투자 장벽을 세우지 않기로 한 것은 보호무역주의 근절을 위한 참여국가의 결단력을 보여준 것으로 미국 역시 이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됨.

○ 최운하(Common Wealth Bank(동포은행), 회장)

- 오바마 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오바마 변수라기보다는 경기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의 국민정서에 기초하여 자연스럽게 표출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미국산업의 자존심인 GM 등의 도산 위험이 높아질 경우, 부정적인 대외정서가 일시에 확산될 수 있으며, 이는 일본 또는 한국 자동차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으로 표출될 수 있음.

○ Katherine Barbieri(South Carolina 대학교, 정치경제학 교수)

- 오바마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자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신정부 경제팀에 NAFTA를 성사시키고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 인사를 다수 포함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임.
- 오바마 정부는 자유무역을 반대하기보다는 공정무역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2. 우리나라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가. 개요

구분	내용
기회 요인	• 임기 내 한-미 FTA 발효 →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양국 간 투자교류 활성화 • 대중국 견제 강화 →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에서 반사이익 • 초고속 인터넷 보급 확대 → IT 장비 수출 확대 • 보건의료 부문 개혁 → 건강기록 전산화 등 IT 장비 수출 확대 • 그린산업 육성 → 국내 관련 산업 발전과 대미수출 및 투자 확대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 대미 투자진출 확대
위협 요인	• 보호무역주의 압력 증가 → 전반적인 대미 수출 위축 • 일자리 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중단 → 그린필드 투자 감소 우려 • 중국산 섬유쿼터 폐지(2008.12.31일부) → 니트 원단 등 경쟁품목 위주로 대미 수출 급감

* 한-미 FTA 발효는 자동차 부문 추가협상(Side agreement)을 전제로 함.

* 중국산 섬유쿼터 폐지는 오바마 정부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2009년 대미 통상환경 중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포함하였음.

- 오바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은 우리나라에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으로 모두 작용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기회 요인으로는 임기 내 한-미 FTA 발효,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 초고속 인터넷 보급 확대, 보건의료 부문 개혁, 그린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을 꼽을 수 있음.
- 반면, 보호무역주의 압력 증가, 일자리 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중단, 중국산 섬유쿼터 폐지(2008.12.31일부) 등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나. 기회 요인

□ 한-미 FTA 발효

- 올해 상반기에는 내각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와 경기 부양책 마련에 분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빨라야 하반기에나 한-미 FTA 비준이 가능할 전망이다
- 한-미 FTA 발효 시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대미 수출에 있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침체 여파로 가격에 민감해진 소비자를 유인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기대됨.
- 상하원 모두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자동차 부문 재협상 없이는 비준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비준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한미FTA 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FTA가 한미 양국 간 경제관계 뿐만 아니라 안보관계에 있어서도 중요도가 크다는 점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의회 비준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임.
- 박윤식 조지 워싱턴대 국제금융 교수는 가이스너 재무부 장관, 서머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로머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모두 프로 트레이더들이고, 론 커크 USTR 대표 역시 NAFTA 예찬론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미 FTA 비준 전망은 밝다고 언급함.
- 다만 경제위기 해결에 한숨을 돌리고, 내각 내정자 상원 인준이 완료될 올 하반기쯤 한-미 FTA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회가 문제삼고 있는 자동차 부문 재협상에 대해서는 추가협상(Side agreement)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
- Myron Brilliant 미 상공회의소 US-Korea Business Council 회장은 의회 지도부가 한-미 FTA 비준에 대한 지지의사를 피력해주는 조건으로 자동차 이슈에 대한 추가적 양허(Concession) 또는 개선(Progress)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든 백악관과 미국 자동차업계 대표 간 의견 조정 단계를 거칠 것으로 예상함.

□ 중국에 대한 견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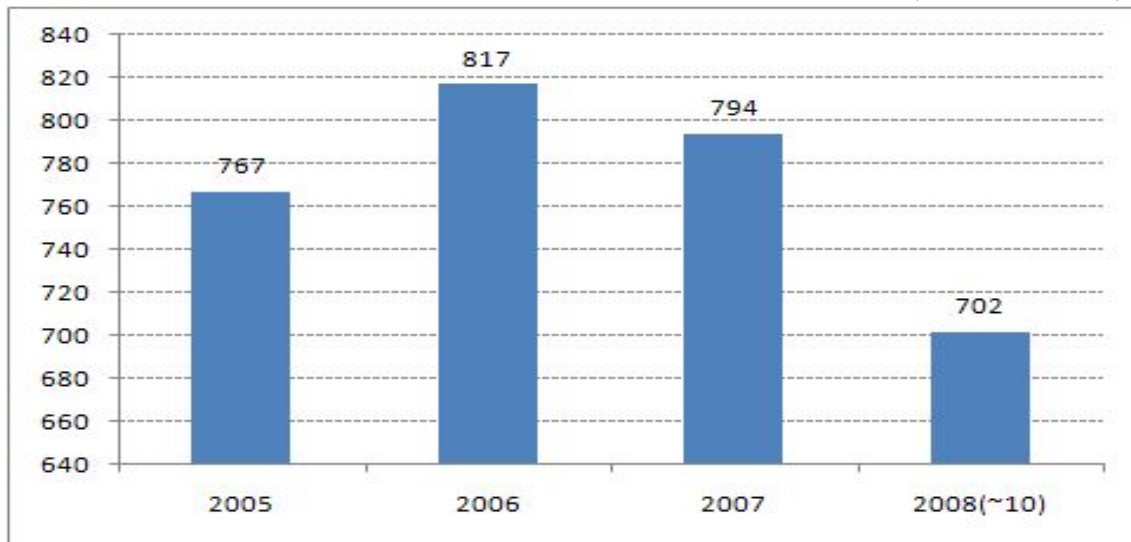
-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 심화 및 저평가된 위안화, 증치세 환급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오바마 정부와 중국의 마찰 가능성이 높음.
- 오바마 대통령은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 시절, 공화당 Bunning 상원의원과 민주당 Stabenow 상원의원과 함께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 수출품에 보조금 지급 및 환율 조작(외국 통화 평가절하 시)이 있는 것으로 판정 시, 상계 관세를 부과토록 하는 Fair Currency Act of 2007(현재 상원위원회에 계류중)을 도입한 바 있음.

<Fair Currency Act of 2007>

-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 수출품에 보조금 지급 및 환율 조작(외국통화 평가절하 시)이 있는 것으로 판정 시, 상계 관세를 부과함.
- 중국산 수입품으로 인해 미국 국내산 동종 유사제품 생산자에게 시장 혼란이 야기되는지 판단하는 조건으로 환율 조작을 포함함.
- 미 국방부가 미국 내 주요 방위산업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산 방위 제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동 법안 조항들을 캐나다, 멕시코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 현행 "1988년 환율 및 국제경제정책 조율법(Exchange Rates and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Coordination Act of 1988)"을 개정하여, 재무부 장관이 연례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외국 정부의 근본적인 환율 조작 여부를 고려토록 하고, 긍정 판정 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양자 협의를 개시함.

<미국의 연도별 대중 적자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자료 : World Trade Atlas

- 오바마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는 WTO 제소를 통한 무역협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부시 정부 시절 미흡했음을 비판하며, 오바마 정부에서는 이의 단행에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한 바 있음.
- 대부분의 대형 통상마찰 케이스를 WTO가 아닌 “외교(Diplomacy)”로 해결해왔던 부시 정부는 미-중간 통상 마찰의 서막으로 작년 12월 19일 중국의 유명브랜드정책(Famous Brands programs)을 수출보조금 및 산업보호 정책이라는 이유로 WTO에 양자 간 협의를 요청함.
- 미국 무역위원회(USITC) 역시 작년 12월 22일 중국산 배관용 탄소강관에 대하여 상계관세 35.63~40.05% 부과 결정(한국산도 반덤핑 피소되었으나, 제소 철회로 조사 종료)
- 철강은 통상 마찰의 조기 징표산업으로 간주되고 있어 향후 다른 산업에 대한 통상 마찰로 번져나갈 가능성이 높음.

7) ‘유명수출브랜드’정책(상무부 지정)과 ‘세계 톱 브랜드’정책(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지정) 포함, 유명수출제품에 대해 현금보상, 특혜용자, 신제품 연구개발비 및 수출보험 지원 등 단계별 다양한 지원 제공

- 중국산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경우,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품목에 있어 한국산 수출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음.
- 일례로, 배관용 탄소강관은 중국에 이어 한국이 제2의 수출국으로 상대적인 우위 확보 가능
- 다만 미 재무부 채권(T-Bill) 구입을 통해 미국 재정 적자를 지지해주고 있는 중국 정부가 보유한 채권을 급작스레 매도하거나 추가 채권 구입을 중단할 경우 미국 경제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오바마 정부가 강경한 대중 견제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한계로 작용할 것임.

□ 초고속 인터넷 보급 확대

- 브로드밴드 설치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통신 속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프로젝트에 60억 달러 투자
- 비즈니스 워크지에 따르면 브로드밴드 신규 설치 기업은 최대 60%까지, 통신 속도 개선 기업은 최대 40%까지 세액 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안이 논의 중임.
- 학교, 도서관, 보건의료 기관들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경우 세금 혜택이나 교부금을 지급받게 되며, 주정부 차원에서도 현재 커버리지가 없는 지역 내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확충할 경우 세금혜택이나 교부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유무선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IT 장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국내 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됨.

□ 보건의료 부문 개혁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건의료 부문의 개혁은 복제약(제네릭), 예방진단(Diagnostic) 장비, 의료 정보 관련 IT 장비 등의 수요를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됨.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 미국 내 일자리(풀타임)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우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대미 진출 투자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 단, 외국인투자 및 국가안보법(FINSA :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⁸⁾과 반독점법(Antitrust) 등이 인수합병을 통한 미국 진출에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동 법안은 중국 CNOOC의 Unocal 인수 포기, UPW(두바이 포트 월드)의 미국 항만운영권 포기 등 중국과 아랍 국가를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지만 CFIUS 검토 거래 대상의 정의가 “국가 안보와 관계” 또는 “주요한 인프라 산업” 등으로 광범위하여 국내 기업 진출 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다. 위협 요인

□ 중국산 섬유 쿼터 및 베트남산 섬유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종료

- 오바마 정부와 직접 관련된 정책은 아니지만 중국산 34개 섬유 제품에 대한 쿼터가 작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중국산 섬유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1월 1일부로 EU의 중국산 섬유 쿼터가 폐지되자 중국 제품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50%로 폭등한 바 있음.
- 2007년 1월부터 베트남산 바지, 셔츠, 내의, 수영복, 스웨터 등 5개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나 부시 정부 임기 만료와 더불어 종료 예정

8) 기존의 Exon-Florio Amendment(Section 5021 of the 1988 Trade Act)를 대신하는 법으로,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CFIUS(재무부를 의장으로 한 13개 부처로 구성)가 외국 정부 소유의 기업이 미국 기업의 인수합병에 참여하거나 주요한 인프라 시설의 통제권이 관련된 거래일 경우 해당 거래를 검토함. 검토 결과,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추진 중인 거래가 중지되거나 금지되며, 기 성사된 투자에 대해서도 강제 매각이 가능함.

- 미국 내 관련 업계에서는 프로그램 폐지 후 베트남 섬유 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입가격 감시가 이전보다 느슨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중국산 섬유 쿼터로 반사이익을 누렸던 한국산 니트 원단(Category 222) 등의 대미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됨.
- 단, 미국 섬유업계의 요청으로 중국산 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업체는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중국산을 타깃으로 하는 수입규제에 동반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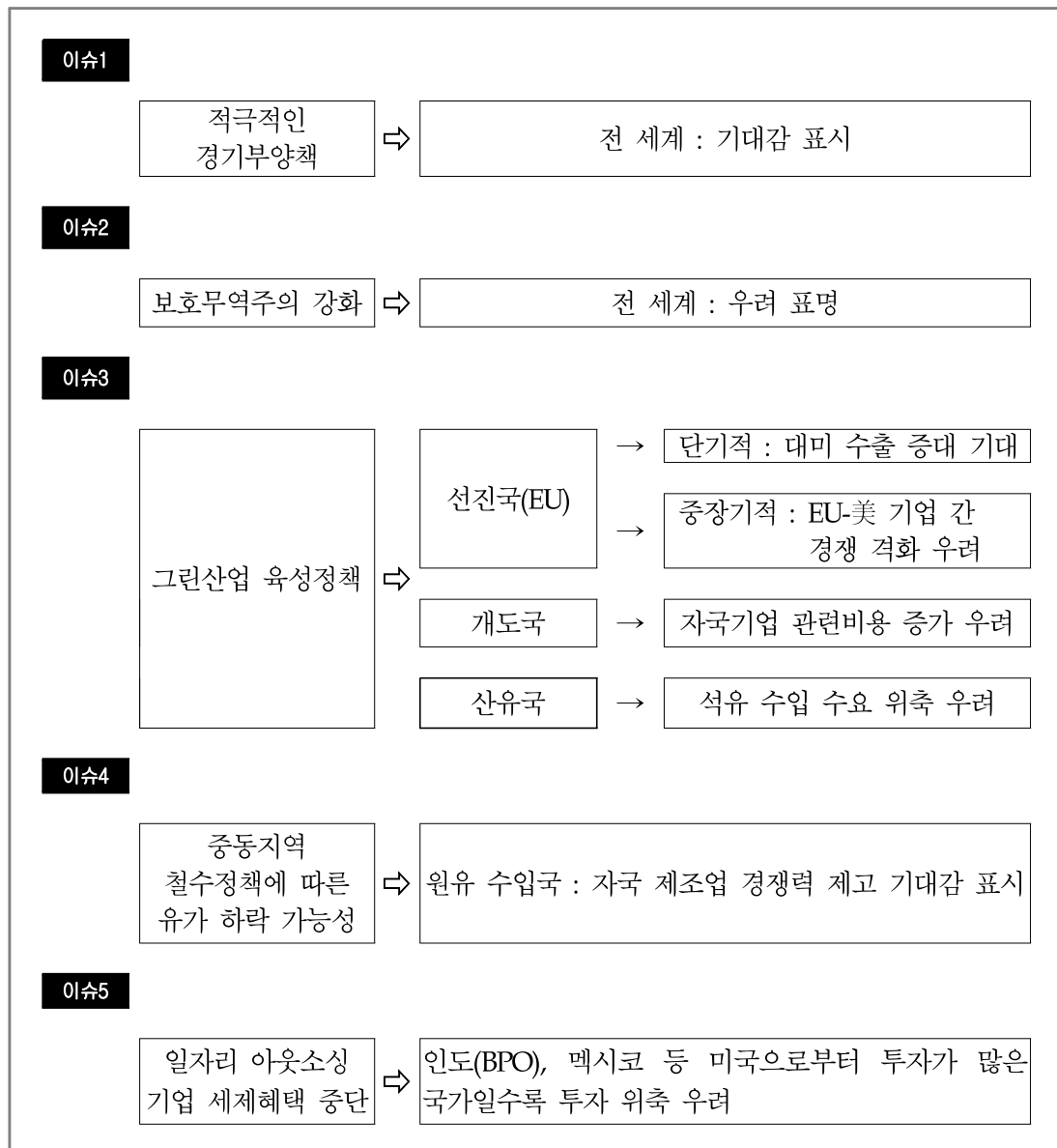
□ 그린필드 투자 감소 우려

-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유세 당시부터 미국 내 치솟는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대외 투자 인센티브로 작용했던 과세이연(Tax deferral : 해외 수익이 국내에 송금될 때까지 과세 이연) 제도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함.
- 구체적인 시행안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으나, 미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처⁹⁾인 아일랜드 등의 국가로부터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미 업계 역시 법인세율 인하 없는 세금이연 제도 폐지는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함.
- 아일랜드 법인세율은 미국(35%)의 약 1/3에 불과한 12.5%이며, 강력한 로비를 통해 과세이연 제도 중단을 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아일랜드 내에 형성됨.
- 이와 관련, 미국 기업의 해외 그린필드 투자 감소는 우리나라의 미국기업 투자유치 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단, 미국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해외투자 대상지로 안정성이 결여된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보다는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에게도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음.

9) 아일랜드가 투자 유치한 대표적인 미국 기업으로는 Microsoft, Intel, Pfizer, Dell, Google, Apple Computer, HP 등이 있음.

3. 오바마 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국 평가

가. 개요



- 오바마 정부의 경제·산업정책과 통상정책에 대해서 주요국들은 각국이 처한 산업발달 수준이나 원유생산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나타냄.
- 오바마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모든 국가가 기대감을 표시한 반면, 미국 내 일자리 확보를 위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냄.

- 특히 중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중국을 타깃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 수출품에 보조금 지급 및 환율 조작(외국통화 평가절하)이 있는 것으로 판정 시, 상계관세를 부과토록 하는 Fair Currency Act of 2007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요구가 거세질 것을 우려함.
- 오바마 정부의 그린산업 육성정책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산유국 간 입장차이가 나타남.
 - 독일을 포함한 EU의 경우,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강점을 갖고 있어 미국의 그린산업 육성정책이 자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증대 등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미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 시 미국과 유럽 기업 간 경쟁격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도국의 경우, 미국의 환경규제 강화가 자국 기업들의 관련 비용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사우디와 같은 산유국은 그린산업 육성정책이 장기적으로 석유 수입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중동지역 철수정책에 따른 유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 인도 등 대부분의 원유 수입국들이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이유로 기대감을 표시함.
- 오바마 정부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 아웃소싱 기업에 세제혜택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많은 국가일수록 피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도는 이러한 조치가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등 각종 아웃소싱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미국과 이웃한 멕시코 역시 그린필드 투자 감소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중국

□ 오바마 정부 출범에 따른 현지 반응

- 중국 정부는 대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례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최고 지도부가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전을 보낸 바 있으며,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는 기대감이 크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다소 경계하고 있음.
 - 동북아정책이 기존 공화당의 미·일 동맹 중시 정책에서 다자간 협력 위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미 관계가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함.
 - 경제적 측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평소 중·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위안화 절상을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중국 통상 압력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중국 언론은 대체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을 매우 이성적이고, 실무적이고 침착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대미 수출을 규제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중국의 수출 위주 정책에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함.
 - 이밖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복 남동생이 현재 중국 선전(深圳)에 있는 복지관에서 6년째 봉사활동을 하면서 중국 여성과 약혼을 했고, 오바마의 여동생의 남편도 캐나다 국적의 화교라는 소식을 전하는 등 오바마 대통령의 중국과의 인연에 주목하고 있음.
- 중국 기업들은 대체로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면서 특히 방직, 철강, 완구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함.
 - 미국 내 제조업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수입을 규제할 것이며, 이는 대외의존도가 60%에 달하는 중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함.

□ 중-미 교역 및 투자관련 주요 현안

- 중-미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오바마 정부의 위안화 절상 요구
 -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는 위안화 환율 조작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미국과 글로벌 경제, 중국 자체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중국은 외환정책을 포함하여 자체 정책을 변화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과의 스인홍(時殷弘) 교수는 "미국의 위안화 절상에 따라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 중국이 보유한 달러표시 자산가치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면서 "중국이 미국국채 물량을 축소시킬 경우, 미국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함.
- 중국산 제품을 타깃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대두
 - 중국은 미국의 대표적인 무역적자 상대국이며, 오바마 대통령은 전미섬유업계 이사회에 쓴 편지에서 "중국의 수입상품이 관련 법률과 조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겠으며, 국방부는 미국이 제조한 방직품만 구매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내수를 발전시키고, GDP내 내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제의한 바 있으며, 이는 사실상 중국 수출의 GDP 비중을 낮추고 대미 수출을 줄일 것을 요구한 것임.

□ 이해득실 관계

- 유리한 점
 - 오바마 대통령의 중동지역 철수 정책으로 국제유가가 지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제조업에 새로운 발전기회가 될 것임.
- 불리한 점
 -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위안화 평가절상, 반덤핑 조치 남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중-미 무역마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다. 일본

□ 오바마 정부 출범에 따른 현지 반응

- 오바마 대통령 당선 직후 가와무라 관방장관은 “일-미 관계는 미국 정권이 바뀌더라도 변화가 없을 것이며 부시 정부와 동일하게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일본 언론은 가이스너 재무부 장관이 일본어를 배운 적이 있는 일본통으로 경제협력 면에서 일본의 중요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도한 반면, 일부 언론에서는 공화당 부시 정부와 양호한 관계를 끌어온 일본 정부가 민주당 오바마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원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기도 함.

□ 일-미 교역 및 투자관련 주요 현안

- 미국은 일본의 1위 수출 대상국, 2위 수입 대상국으로 1980년대 반도체, 자동차 문제, 1990년대 철강 문제 이후에는 특별한 무역마찰은 없었으며, 현재도 큰 현안은 없는 편임.
- 단, 소고기 수입 관련, 일본은 현재 생후 20개월 이하의 특정부위를 제외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한 철폐를 요청하고 있음.

□ 이해득실 관계

- 유리한 점
 - 일본의 관심이 높은 지구 온난화 문제와 관련하여 부시 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에 따라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높아짐.
 - 오바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엔고의 움직임을 일단 주춤케 하고 있으며, 향후 오바마 정부 운영방향이 엔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불리한 점

- 미국은 대이라크, 대아프가니스탄 미군 파병으로 연간 1,9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향후 경기 부양정책으로 대폭적인 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일본에 이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거나, 오키나와 등지에 파견되어 있는 주일 미군의 규모(현재 2,000명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있음.
-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했던 만큼 오바마 정부 역시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짙어질 우려가 있음.

라. 인도

□ 오바마 정부 출범에 따른 현지 반응

- 인도 정부는 역사적으로 민주당 대통령이 인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으며,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인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것을 들어 향후 양국의 관계가 돈독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원론적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향후 오바마 정부의 정책 노선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리고 인도-파키스탄 간의 카슈미르 분쟁지역과 관련한 오바마 정부의 입장¹⁰⁾이 어떨지에 대하여 우려 섞인 시선도 있음.
- 인도 언론은 인종적 측면에서 반(半) 흑인, 일리노이 초선 상원의원인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에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하며, 경제적으로는 오바마 정권의 보호무역주의 색채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음.
- 특히 인도 경제를 견인하는 한 축인 BPO 등 아웃소싱 관련 오바마 대통령의 부정적인 견해에 대하여 우려 섞인 보도를 한 바 있음.

10) 인도 정부는 영토 분쟁지역을 명백히 인도 영토로 인식하고 있으며, 알카에다 소탕을 위해 파키스탄의 적극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국이 파키스탄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해당 사안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음.

□ 인-미 교역 및 투자관련 주요 현안

- 미국은 인도의 총 수출액 중 17%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대상국으로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인-미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하고 있어 인도의 대미 수출 전망은 크게 어두워지지 않을 전망이다.

□ 이해득실 관계

○ 유리한 점

- 오바마 정부의 중동지역 철수 정책으로 국제유가가 지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 제조업에 새로운 발전기회가 될 것임.
- 보호무역주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를 필두로 한 서남아시아 지역과의 경협관계 강화를 최우선 경제정책 중의 하나로 꼽고 있어, 인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최근 일부 의원이 미국의 H1B 비자 프로그램 확대 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우수인력의 해외 진출을 통한 외화 획득을 장려하고 있는 인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불리한 점

- 오바마 정부는 인도가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을 저감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해당 산업의 활성화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이를 위한 비용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파키스탄의 아프가니스탄 알카에다 소탕 작전에 깊이 관여하고 싶어 하는 미국 정부가 잠무-카슈미르 주 인-파 분쟁 관련, 파키스탄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관여할 수 있음.
- 오바마 정부가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BPO 등 각종 아웃소싱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마. 대만

□ 오바마 정부 출범에 따른 현지 반응

- 대만의 마잉지우(馬英九) 총통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 직후 “대만-미국 간 친선관계를 증진하고 이해 및 협력·신뢰 관계를 제고할 것을 바라며, 오바마의 지도 아래 미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기가 회복될 것을 확신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냄.
- 대만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만에 대해서 뚜렷한 지지 의사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미·중·대만 관계에 있어 급격한 변화보다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관계법’에 입각하여 현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함.

□ 대만-미 교역 및 투자관련 주요 현안

- 미국은 대만의 연간 수출규모의 12%를 차지하는 2대 수출 대상국으로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따른 대미 수출 감소가 우려됨.
- 또한 대만은 중국의 최대 중간재·원자재 공급국가로서 중국의 대미 수출 축소에 따른 간접 타격까지 입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이해득실 관계

- 유리한 점
 - 오바마 대통령이 대체에너지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대만의 LED¹¹⁾, 태양에너지, 풍력발전, 고효율 전지 등 관련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이며, 대미 수출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5월 마잉지우 총통 취임 시 “미국은 대만에 필요한 방어 무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대만을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야

11) 대만의 LED 산업은 2000년에 이미 생산량 기준 세계 1위, 생산액 기준 세계 2위를 차지했으며, 2007년에는 생산액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이 25.2%에 달함.

한다.”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으며, 작년 10월 부시 대통령의 대대만 군수품 판매 결정에 대해서 동의를 표한 바 있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예상됨.

○ 불리한 점

- 오바마 정부의 위엔화 절상 압력에 대해서 중국은 수출 부진과 경제성장을 하락 등을 이유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의 의견 대립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국 진출 대만기업이 상대적으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 소지가 있음.
- 집권당인 국민당의 싱크탱크인 국가안전팀은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이 중국과의 협력 관계 증진을 중시하는 만큼 대만의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려는 친중 경향을 보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함.

바. EU

□ 오바마 정부 출범에 따른 현지 반응

- EU, 회원국 정부, 언론, 기업 모두 오바마 정부에서의 범대서양 관계가 부시 정부에 비해서 모든 측면에서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부시 정부 하의 지난 8년은 이라크 전쟁, 테러와의 전쟁 등으로 인해 EU-미국 간 관계에서 긴장이 지속되었기 때문임.

□ EU-미 교역 및 투자관련 주요 현안

- 글로벌 경기위기 대처
- EU가 오바마 정부 출범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사항으로, 글로벌 위기 대처방안에 대한 EU와 미국 간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 특히 2009년 4월 EU가 오바마 대통령의 유럽의회 총회 참석 및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두 참여한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등 EU-미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EU-미국 간 무역분쟁

- 오바마 정부에서도 WTO 내 미국과 유럽 간 마찰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유럽 옵서버들은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는 오바마 정부와 부시 정부 간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현재 EU-미국 양자 간 주요 무역·투자 관련 현안으로는 EU측 제도 중 REACH(유럽 화학물질 등록관리제도)의 명료성 개선, 돼지고기 및 관련 식품 수입관련 규정 개정 등이 있고, 미국측 제도로는 2012년부터 적용될 미 항구 정박 컨테이너에 대한 100% 스캔(Scanning) 의무화 조치 등이 있음.

○ 기후변화 협약을 비롯한 환경문제

- 부시 정부와 달리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유럽의 친환경주의자들이 큰 기대를 하는 반면, 오바마 정부가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환경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유럽 간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함.

□ 이해득실 관계

○ 유리한 점

- 오바마 정부는 경기부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기업에게 세금부담을 강화할 것이며, 이는 미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미국과의 경쟁관계가 높은 자동차와 항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유럽기업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혈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아프리카 지역 간 관계가 강화되면서 지금까지 유럽으로 몰려들던 아프리카 이민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유럽이 당면하고 있는 아프리카 이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불리한 점

- 오바마 정부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할 경우, EU의 대미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오바마 정부가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환경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유럽 간 경쟁 격화 우려

사. 프랑스

□ 오바마 정부 출범에 따른 현지 반응

- 프랑스 정치권은 우파에서 좌파에 이르기까지 오바마 정부 출범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대세이며, 특히 사르코지 대통령은 과거 선거기간 중에도 은근히 오바마 후보의 당선을 기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오바마 당선자가 다소 중도좌파적임에도 불구하고 우파 정부인 사르코지가 선호하는 이유는 둘 사이에서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 나이가 비슷하다는 점과 과거 전임자(프랑스 시락 대통령과 미국 부시 대통령)들이 망쳐놓은 양국 간의 관계를 개선시키려는 의지가 둘 사이에 충만하다는 점도 공통점으로 볼 수 있음.
- 프랑스 언론의 가장 큰 관심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사실과 함께 유럽대륙에서 가장 많은 흑인이 살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과연 흑인 대통령 탄생이 가능할 것인가임.

□ 프랑스-미 교역 및 투자관련 주요 현안

- 양국 간 교역의 특징은 상품교역의 62%가 항공, 의약, 메디칼, 전자, 기계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제품은 양국 모두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분야임. 특히 교역상품 대부분이 상호 투자기업에 의한 기업 내부 거래(Intra-firm), 산업 내부 거래(Intra-industry)의 성격을 갖고 있어 교역관련 분쟁 가능성이 낮음.

- 다만 농업분야에서의 보조금 지급, 프랑스 정부의 과도한 공기업 보유, 이라크 전쟁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반대¹²⁾ 등으로 인해 양국 간 긴장이 발생한 적이 있음.

□ 이해득실 관계

○ 유리한 점

- 프랑스는 오바마 대통령 출범이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양국 간 긴장을 완화하고 지구 온난화, 이란 비핵화, 팔레스타인 문제 등의 전 세계적 이슈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원하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함.

○ 불리한 점

- 국제 교역에 있어서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소수이지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음.

아. 독일

□ 오바마 정부 출범에 따른 현지 반응

- 부시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이라크 파병,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미온적 대응 등으로 다소 마찰을 빚어 왔던 독·미 관계는 2005년 말 메르켈 총리가 취임하면서 다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며, 오바마 정부 출범을 미국과 EU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환영하는 분위기임.
- 독일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의 금융위기 극복 능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외교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주둔과 관련하여 독일에 보다 많은 요청사항이 생길 가능성과 함께 파키스탄에 독일군을 파병하는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언급함.

12) 2003년 이라크전쟁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반대로 인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적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프랑스 상품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음. 그러나 이러한 불매운동은 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양국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2003년에서 2007년까지 프랑스 상품 수출은 와인, 향수, 핸드백, 치즈 등 일반 소비제품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음.

- 독일 기업들은 오바마 정부 출범을 대체로 환영하며, 재생에너지 업계, 환경기술 업계 등이 특히 오바마 정부 정책의 수혜자로 인식됨.

□ 독-미 교역 및 투자관련 주요 현안

- 독일의 대미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위기 극복이며, 독일은 경제위기 타파를 위한 G8 정상회담에서 투명한 금융시장과 보다 엄격한 헤지펀드 관리 등을 주장했으나 미국과 영국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 오바마 정부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세계 수출 1위인 독일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음.

□ 이해득실 관계

○ 유리한 점

- 부시 정부와 많은 이견을 보였던 부분에서 재협상 내지 대화의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경제 및 외교적 협력 관계가 개선될 수 있으며 국제적인 공조가 기대됨.
- 독일은 재생에너지 강국으로서 오바마 정부가 그린산업을 집중 육성할 경우, 태양에너지 모듈, 풍력 발전 등 독일 관련 기업의 대미 수출에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
- 오바마 정부에서의 단계적인 중동지역 철수 정책으로 국제유가가 지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비교적 안정될 수 있어 독일 제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불리한 점

- 독일에게 가장 중요한 판매시장인 미국과 유로 존의 경제 위축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함에 따라 수출과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오바마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기타 중동지역에 추가 파병을 요구할 경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독일의 군사적 역할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독일 정부와 마찰을 가져 올 수 있고, 이는 향후 양국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자. 영국

□ 오바마 정부 출범에 따른 현지 반응

- 영국 정부와 언론은 오바마 정부 출범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특히 이라크 전쟁을 주도한 데 따른 부정적 시각, 최근의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위기감 고조 등으로 인해 정권의 레임덕 현상에 놓여 있는 영국 정부로서는 오바마 정부와의 공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
- 고든 브라운 총리는 2월에 미국을 방문하여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4월에 런던에서의 G20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세계 경제에서의 브라운-오바마 체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계획임.

□ 영-미 교역 및 투자관련 주요 현안

- 양국 간 특별한 현안사항은 없음.

□ 이해득실 관계

- 유리한 점
 - 오바마 정부가 미국의 금융위기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어 금융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연결(Inter-related)되어 있는 영국은 유리한 입장임.
- 불리한 점
 - 무역에 있어서 전통적인 민주당 정권의 보호무역주의가 위협요소로 등장할 수 있음. 다만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과 통상정책에 있어서 아직까지 유럽과의 무역에 악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은 발표된 바 없음.

차. 러시아

☐ 오바마 정부 출범에 따른 현지 반응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올해 신년 메시지 발표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실용주의와 이익 균형의 관점에서 상호 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작년 11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미국 부시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매우 깊고 의미 있는 관계지만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호 신뢰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어, 오바마 정부에 대해 갖는 기대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러-미 교역 및 투자관련 주요 현안

- 러시아의 WTO 가입
 - 러시아는 작년 그루지야와의 충돌로 인해 WTO 가입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미국의 지원을 받아 WTO 가입을 서두를 가능성도 있음.
- 잭슨-배닉 수정법(Jackson-Vanik Amendment) 폐지
 - 미국은 1974년부터 잭슨-배닉 수정법에 따라 소련(現 러시아) 등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 매년 최혜국 대우를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해 왔으며, 러시아는 무역차별조치로서 적용되는 동 법의 폐지를 요청해 왔음.
 - 단,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면 중국과 마찬가지로 동 수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이해득실 관계

- 유리한 점
 - 실용주의와 상호 이익의 균형에 바탕을 둔 관계 정상화
 - 러시아의 WTO 가입에 대한 가능성 증대

○ 불리한 점

-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의 舊소련 국가에 대한 대외정책에 있어서 반러시아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의 중동지역 철수정책에 따른 유가 하락으로 에너지 자원 및 광물자원의 수출비중이 높은 러시아의 수출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카. 멕시코

□ 오바마 정부 출범에 따른 현지 반응

- 멕시코 정부는 오바마 정부에 기대감을 과하게 표시하지 않고 양국 간 건설적인 협력관계 구축 의지를 내비치는 등 비교적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음.
- 멕시코의 국제문제 전문가들은 부시 정부에 비해서 양국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아직까지는 선불리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 일부 멕시코 기업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오바마 정부의 보호주의 경제정책이 멕시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으며, 대미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 경제 여건 상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음.

□ 멕시코-미 교역 및 투자관련 주요 현안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 오바마 정부는 자국 기업의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유도하여 국내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로 인해 멕시코 제1의 직접 투자국인 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입액이 줄어들 것을 우려함.

○ NAFTA 재협상

-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NAFTA 재협상을 주장했지만 정치적,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당분간 실질적인 논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국경 안보, 미국 내 멕시코 이주자 지위 문제, 마약 문제 등 사회 및 안보관련 이슈

- 미국 정부는 마약범죄 퇴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반면, 멕시코는 불법 이민자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음.

□ 이해득실 관계

○ 유리한 점

- 금년 1월 12일 취임 직전의 오바마 대통령과 멕시코 칼데론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비공식 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으며, 동 회담에서 오바마는 멕시코가 중남미 지역의 리더국임을 인정하고 멕시코와의 관계 심화에 노력할 것임을 밝힘. 특히 현 멕시코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노력과 용기를 높이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음.

○ 불리한 점

- 오바마 정부가 보호주의적인 통상정책을 실시할 경우, 미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됨.
-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NAFTA 재협상을 줄곧 주장한 만큼 실제로 재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양국 간 통상마찰 및 긴장관계 조성

타. 브라질

□ 오바마 정부 출범에 따른 현지 반응

- 브라질 내에서는 대체로 오바마 정부 출범이 미국-브라질, 미국-중남미 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브라질 대통령 전략문제 특별 보좌관(장관급)인 호베르토 망가베이라 웅게르(Roberto Magabeira Unger)는 "미국과 브라질이 유럽 이민자들에 의해 건국됐고, 비슷한 국토 면적과 아프리카 노예 유입 등 공통된 역사를 갖고 있다."며 동질성을 강조하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신흥개도국 그룹의 리더인 브라질은 앞으로 함께 가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 오바마 정부 출범이 양국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언급함.
- 중남미 지역에서는 미국-중남미 관계가 과거의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향'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으며, 오바마 측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마약퇴치와 쿠바와의 관계 등에서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면서 "중남미 지역을 대등한 협력자로 간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브라질-미 교역 및 투자관련 주요 현안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 오바마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브라질 정부는 미국 정부에 대해 보호무역주의 완화를 줄곧 요구해 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 미국의 농업보조금 제도
 - 미국 정부는 옥수수, 대두, 밀 등의 곡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지급될 예정인 농업보조금의 총예산은 2,900억 달러로 2008년까지 1,900억 달러가 집행됨.

- 브라질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농업보조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성과를 거둔 바 없으며, 오바마 정부는 부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 농가에 농업보조금 지급을 찬성하는 입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 미국의 에탄올 수입관세 인하

- 현재 브라질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의 에탄올 수입관세 인하로 미국은 현재 브라질산 에탄올에 대하여 기본 관세 외에 1배럴당 0.54달러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이해득실 관계

○ 유리한 점

- 외교적인 관점에서는 오바마 정부 출범이 미국과 브라질의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음. 단, 이는 미국이 남미 또는 중남미 지역 내 브라질의 지도적 위치를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 불리한 점

- 브라질 내 경제 전문가들은 오바마 정부 출범으로 통상 및 대체에너지 분야에서는 당분간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상파울루 주립대학(USP) 경제학과의 단테 멘데스 알드리기(Dante Mendes Aldrichi) 교수는 "보호무역주의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이 브라질로서는 당장 유리할 것이 별로 없다."면서 "농업보조금 삭감이나 에탄올 수입관세 인하 등 브라질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단기간에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함.

파. 사우디 아라비아

□ 오바마 정부 출범에 따른 현지 반응

- 사우디 정부는 중동 내 미국의 최대 우방국으로 부시 정부와는 2005년 걸프전 당시 국민들로부터의 원성을 무릅쓰고 미군 주둔을 허용할 정도로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왔으며, 이러한 강한 유대관계는 오바마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변치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팔레스타인 문제에 있어 유대인 세력에 휘둘린 부시 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정부가 다양한 민족들과의 삶의 경험을 살려 약자인 팔레스타인 편에서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통한 중동지역 경제의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것으로 희망함.
- 다만, 경제 부문에 있어서 대선 기간 중 오바마 대통령이 줄기차게 언급해 온 무역불균형 해소문제, 보호무역주의 및 대체에너지 옹호 정책, 특히 그린에너지 개발을 통한 국제 기후변화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장기적으로 사우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다소 우려하는 분위기임.
- 사우디 언론은 이란이나 팔레스타인 문제 등 미국의 중동에 대한 외교노선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이 아닌 평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주기를 갈망함.

□ 사우디-미 교역 및 투자관련 주요 현안

- 2007년 기준, 미국의 대사우디 무역적자는 270억 달러 규모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통상압력이 있을 수는 있으나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이 미국의 대 사우디 원유 및 가스 수입에 기인한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작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사우디는 부시 정부로부터 잦은 투자요청을 받은 바 있으며, 오바마 정부 출범 후에도 투자 요청이 있을 것으로 관측됨.

□ 이해득실 관계

- 유리한 점
 - 부시 정부에 비해 덜 호전적이며, 중동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내 경제여건과 세계경제 여건 악화로 인해 극단적인 처방이 아닌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됨.

-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미국 부동산과 우량기업을 저가로 매수할 수 있으며, 이는 오바마 정부의 투자요청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우디로서는 경제적 실익을 챙기면서 오바마 정부와의 유대관계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 불리한 점

- 미국이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달러화 발행을 남발하여 달러약세 기조가 고착화될 경우, 사우디 리알화가 달러화에 페깅(Pegging)되어 있는 사우디로서는 오일 수출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 달러화에 대한 현지화의 페깅 시스템 폐지에 대한 심각한 압력에 직면할 수 있음.
- 오바마 정부가 그린에너지 정책을 강조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석유에 대한 수입수요가 위축될 수 있음.

하. 이란

□ 오바마 정부 출범에 따른 현지 반응

- 이란 관료들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이란 외교정책 기조는 같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함.
- 오바마 대통령은 작년 11월 8일 연설 도중 “이란의 핵무기 개발 방지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란 핵 개발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
- 이란은 올해 6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과의 외교관계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입장에서 이란의 외교적 입장이 전혀 변화가 없는 가운데 자국의 정권교체에 따라 대 이란 외교정책을 변화시키기에는 명분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됨.

□ 이란-미 교역 및 투자관련 주요 현안

- 양국 간 외교관계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경제 및 통상 관계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작년 11월 미국은 “미국 금융기관의 모든 이란 관련 자금거래를 금지”시키는 추가 경제제재를 발동함.

□ 이해득실 관계

- 유리한 점
 - 오바마 정부의 대이란 외교정책 역시 기존의 정책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6월에 이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동 결과에 따라서는 양국 간 외교관계에 변화 가능성도 있음.
- 불리한 점
 -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2009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Global Issue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1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회시장 틈새시장	2009.1
09-002	오바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방향과 시사점	2009.1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9.1
09-002	해외 프로젝트 진출 연찬회	2009.1
09-003	해외 주요국 레저보트산업 조사	2009.1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9-001	2009년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09.1
09-002	2009년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 포럼	2009.1
09-003	유럽 재생에너지시장 진출설명회	2009.1
09-004	한미 부품소재 글로벌 파트너링 설명회 및 상담회	2009.1

작성자

◆ 워싱턴KBC	이정선 과장 (jeongsunny@kotra.or.kr)
◆ 상하이KBC	김윤희 과장 (alea@kotra.or.kr)
◆ 도쿄KBC	김경미 과장 (pajama@kotra.or.kr)
◆ 뉴델리KBC	이해인 과장 (haein_lee@kotra.or.kr)
◆ 타이베이KBC	유기자 대리 (liuqizi@kotra.or.kr)
◆ 브뤼셀KBC	김선화 부장 (sunhwa@kotra.or.kr)
◆ 파리KBC	신정수 과장 (shinjs@kotra.or.kr)
◆ 프랑크푸르트KBC	조세정 과장 (sejung@kotra.or.kr)
◆ 런던KBC	송지영 과장 (jysong@kotra.or.kr)
◆ 모스크바KBC	서기원 차장 (kwseo90@kotra.or.kr)
◆ 멕시코시티KBC	유성준 과장 (donquijote@kotra.or.kr)
◆ 상파울루KBC	문진욱 과장 (jw2003@kotra.or.kr)
◆ 리야드KBC	이관석 센터장 (kslee@kotra.or.kr)
◆ 테헤란KBC	한석우 과장 (swhan@kotra.or.kr)
◆ 로스앤젤레스KBC	김재성 차장 (jaesung@kotra.or.kr)
◆ 실리콘밸리KBC	구본경 과장 (bonkyung@kotra.or.kr)
◆ 디트로이트KBC	손병철 과장 (bcson@kotra.or.kr)
◆ 시카고KBC	어재선 과장 (imaro75@kotra.or.kr)
◆ 마이애미KBC	연승환 과장 (yeon@kotra.or.kr)
◆ 뉴욕KBC	최재원 대리 (jaychoi@kotra.or.kr)
◆ 구미팀	김준규 과장 (jkkim1204@kotra.or.kr)

Global Issue Report 09-002

오바마 정부의 경제·통상정책 방향과 시사점

발 행 인 | 조 환 익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09년 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9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